

## 분석적 마르크시즘의 공과(功過)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 ‘신고전파 경제학’의 방법론 논쟁을 통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의 방향 찾기

이상기\*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조교수)

---

마르크스가 스스로 자신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고 밝힌 것처럼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는 결코 마르크스의 위기와 동의어가 될 수 없다.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는 마르크스의 방대한 이론 체계에서 일부분만 떼어 설명하는 데서 나타난 결과일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이 아닌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는 독일 관념론, 프랑스 공산주의, 영국 고전파 경제학을 두루 섭렵했고, 이들을 종합하여 다수의 프롤레타리아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마르크스는 이를 위해 무엇이든 조사했으며, 무엇이든 알고자 했다. 이러한 학문적 자세는 복잡한 현대사회를 설명코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현대의 학문은 분화·발전되어 소통 및 총체적 설명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 신고전파 경제학의 소통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본연의 정치경제학을 되살리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경제학사적 접근방법을 시도했고, 분석적 마르크스주의 시각을 도입했다. 분석적 마르크스주의는 신고전파 경제학은 물론 기존의 사회과학에서 발전되어 온 방법론을 총동원하여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빠뜨렸던 현실과의 간격을 메우고자 했다. 그렇다고 이들의 작업이 모든 이들의 동의를 획득한 것도 아니며,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더욱 아니다. 결국 생산과 소비, 거시와 미시, 구조와 행위를 아우르는 이론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정치경제학에 남겨진 과제이다. 이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에도 해당된다. 특히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분야는 철학(미학), 인문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공학까지 걸쳐 있고, 실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현상과 그와 관련된 정책 또한 다양한 정치경제적 역학구조 속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은 여전히 유효하며, 좀 더 많은 사람의 동의를 획득하기 위해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모든 이론에 열린 자세를 가지고 학제 간 연구가 활성화된다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의 설명력은 더 증대될 것이다.

---

\* lsngk@pknu.ac.kr

주제어: 정치경제학, 분석적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신고전파 경제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

---

## 1. 서론: 마르크스의 위기인가, 마르크시즘의 위기인가?

1980년대부터 출현하기 시작한 소위 ‘포스트주의’는 사회과학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포스트포디즘(혹은 포스트캐피탈리즘), 포스트구조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마르크시즘 등. 이러한 포스트주의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계급 중심주의를 지양하고, 민족, 종교, 인종, 젠더 등의 영역으로 마르크시즘의 인식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도 있지만 더 이상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는 비판도 동시에 받았다. 마르크스(K. Marx) 스스로도 “나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러한 이념(-ism) 논쟁은 학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개념의 엄밀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양한 분파를 창출하여 힘을 결집시키지 못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분석적 마르크시즘’ 혹은 ‘합리적 선택 마르크시즘’도 경우에 따라서는 포스트 마르크시즘으로 분류되곤 하였다. 학문 분류상 ‘주의(-ism)’의 꼬리표를 달고 있지만, 이 학파에 속한 연구자들은 마르크스의 신념을 존중하되 그 방법론을 정밀하게 하지는 취지에서 논쟁을 촉발시켰다. 즉, 이 진영에 속한 학자들은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입각한 미시적 분석들을 연구의 축으로 삼고 있다.<sup>1)</sup> 한국 사회의 사회학계 및 정치학계에서는 이들의 이론을 소개하거나(김용학, 1991, 1992; 신광영, 1991, 2001; 임혁백, 1991, 1994) 학문적인 논쟁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언론학계에서는 이들의 이론이 제대로 소화되지

---

1) 대표적으로 코헨(G. A. Cohen, 1988; 1990)은 마르크스의 역사적 유물론을 구조기능주의적 분석틀로 재해석하였으며, 엘스터(J. Elster, 1982; 1985; 1986/1993)는 합리적 선택의 관점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재해석하였다. 로머(J. E. Roemer, 1982a; 1982b; 1985; 1989a; 1989b)와 라이트(E. O. Wright, 1985)는 착취와 계급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못했다. 학문에도 유행이 있다면, 사실 ‘분석적 마르크시즘’은 유행이 지나갔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십여 년 전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어보는 것과 같은 작업을 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한 미디어 현상을 두고 ‘주류 언론학’과 ‘비판언론학’은 다르게 이야기를 풀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들의 주요 관심사는 결코 같을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 때문이다. 특히, 2006년에 ‘한국지역언론학회’에서 발표한 “사회 양극화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이상기·한혜경·오창호, 2006)”은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공동 연구자였던 세 사람은 공히 마르크스주의로 사회과학에 발을 들여 놓은 후 20여 년 동안 미디어 산업론, 정치 커뮤니케이션, 매체 철학 분야에서 자신의 학문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사회 양극화’라는 공동 연구주제에 대한 인식과 판단은 상이했다. 3개월 남짓한 공동연구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논쟁과 토론을 거쳤다. 그러나 합의된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고, 서로의 이념적 위치를 확인하는 데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자는 정치적으로 좌파이면서 경제적으로 우파인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좌우를 넘나드는 것이 (운동가가 아닌) 학자의 매력일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기회주의자로 보일 수도 있다. 흔히 “스무 살에 마르크스를 모르면 멧덩구리이고, 마흔이 되어서도 마르크스를 고집하면 더더욱 멧덩구리다”라고 한다. 결국 본 연구는 생의 반환점을 넘어선 시점에서 본 연구자의 학문적 방향을 재정립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둘째, 미디어 산업 분석에 있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 ‘신고전파 경제학’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그 매개 고리로서 ‘분석적 마르크스주의’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규명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기존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결합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러한 직제 개편의 필요성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나 그 정책기조는 이전 정부와 아주 상이하다. 즉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기술적 흐름조차 어떤 입장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과거와 전혀 다른 정책이 입안되고 있다.

좌파적 입장에서는 금융·정보통신·미디어 자본의 융합에 의한 자본의 권

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보도 관련 미디어에 대한 소유규제의 정당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본권력의 전제를 막기 위해 대기업의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과거의 법안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신고전파 혹은 신자유주의 입장에서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을 동일 서비스에 대한 동일 규제를 원칙으로, 독점문제 해결도 망 개방, 망 중립, 경쟁체제 촉진 등 시장의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대기업 자본의 방송시장 진출이나 신문과 방송의 겸영조차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기술이다. 그런데 상이한 정치적 입장으로 이러한 기술을 법제화하는 데 오랜 진통과 시간을 요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더욱이 서로 양보하여 어렵게 얻은 타협책조차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뒤집어지는 현실은 더욱 문제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경제 정책은 좌·우를 아우를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 ‘신고전파 경제학’의 접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정치경제학’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데 있다. 경제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초기의 ‘정치경제학’으로부터 시작해 점점 ‘경제학’으로 한정되고 있다(Heilbroner, 1996/2001, pp.387~388).<sup>2)</sup> 마르크스를 포함하여 초기의 경제학자들인 스미스(A. Smith), 리카도(D. Ricardo), 밀(J. S. Mill) 등의 저술에는 가치관과 윤리, 철학적 주제가 함께 언급되었다. 그러나 제번스(W. S. Jevons), 발라(L. Walras), 마셜(A. Marshall), 케인스(J. M. Keynes) 등의 신

2) 흔히 우리사회에서 ‘정치경제학’이라 하면 마르크시즘에 입각한 경제학을 지칭한다. 그러나 초기의 경제학 저술들은 거의 모두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20세기 중엽에 이르러 정치라는 접두어를 떼어낸 경제학(economics)이라는 이름이 통용되기 시작했고, 정치와 경제는 별개의 학문으로 발전해 왔다. 용어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정치경제학’은 마르크스를 포함한 그 전후의 경제학(정치적 맥락을 고려한)을 지칭하고,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정치경제학’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이라고 표기한다.

고전과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제 요소들을 무시해버렸고, 그렇게 하여 정화되어진 경제학은 ‘과학적 연구’로 변모했다. 그 결과 사회적·정치적 고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고, 최대화나 극대화처럼 합리적 행태만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으며, 비굴한 복종 또는 끝없는 욕망과 같이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아울러 현실적 시사점에 대한 고려는 분석에서의 중요도가 낮아질 대로 낮아졌고, 경제 정책도 분석의 ‘엄밀함’이 우선시되었다.

결과적으로 “화성에서 온 외계인이 주류 경제학회지를 물리학회지로 착각한다 해도 탓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Heilbroner, 1996/2001, p.388).” 즉, 오늘날의 경제학은 너무나도 ‘수학적인’ 과학이 되어버렸다. 물론 경제학이 생산량과 소비량, 수입과 지출과 같이 양과 수치를 다루는 학문이고, 양과 수치란 본질적으로 수학적인 탐구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학이 계량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더 나아가 ‘경제적’이라는 일상용어가 ‘절약’과 ‘정확’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 — 똑같은 것을 설명하더라도 보다 간결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 경제학에서 수학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별로 어색하지 않다. 그렇지만 비의도적 결과로서 현대 경제학은 ‘경제학을 위한 경제학’ 혹은 ‘과학을 위한 과학’이 되어버린 측면도 없지 않다.

즉, 경제학이 수학을 통한 논리적 엄밀성은 얻었지만 형식논리적 엄밀성에 집착하게 되면서 경제 이론은 ‘이론을 위한 이론’인지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거시 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만든 경제 모형을 ‘장난감 경제’로 지칭하며 현실 상황과 모형이 설명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케인스도 형식논리적 추론보다 경제학자의 직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지만 그 주장은 거의 무시되고 있다. 크루그만(P. Krugman)은 경제학이 지나치게 수리화된 것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없는 학자들이 기존의 이론에 수학의 외피를 입혀 단순 재생산한 결과라고 혹평하면서 경제학의 수리화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항상 현실 경제 문제와의 연관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함

을 역설했다(정운찬, 2000, 86~87쪽).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는 기술의 중요성이 급증하고, 국제 금융과 투자에 의해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환경적 위협과 자원고갈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시대에는 정치경제학의 전통이 되살아나야만 한다. 다시 말해 사회·정치적 현실을 고려한 경제학이 부활될 필요가 있다. 공공 선택(public choice) 및 제도주의 경제학 분야가 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Downs, 1957/1997; Gordon & Adams, 1989/1995; Rowley, 1993),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 ‘신고전파 경제학’을 연결시키려 했던 ‘분석적 마르크시즘’에 대해 본 연구자가 다시금 관심을 갖는 이유이다.

## 2.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 ‘신고전파 경제학’의 인식론과 방법론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 ‘신고전파 경제학’의 단절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자는 경제학사적 접근 방법을 취하였다(우에노 이타루 외, 2001/2003; Breit and Hirsch, 2004/2004; Buchholz, 1989/1994; Caldwell, 1993; Galbraith, 1987/2002; Heilbroner, 1996/2001; Muller, 2002/2006; Strathern, 2001/2002). 이를 통해 마르크스가 경제학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경제학사적 측면에서 마르크스는 양면적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자(경제학자)”이자 그 “비판적 예언의 비적합성으로 인해 과학자라기보다는 혁명가(사회정치학자)”라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경제학을 망쳤고 또한 잘못된 경제학을 바로잡았다. 그가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제시한 공산주의는 실패했지만, 자본주의에 가했던 예리한 비판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답을 얻지 못했다(Strathern, 2001/2002, p.224).” 선진산업국가들은 마르크스의 혁명으로부터 스스로 크게 면역되어 있는 것을 입증했다. 개혁, 복지를 위한 수단,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관료적 대기업과 조직 인간의

용성 등 모든 것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혁명을 위한 입력을 완화시켰고 나아가서는 파괴했다(Galbraith, 1987/2002, p.174). 오늘날 마르크스가 경제학계보다 인문사회과학계에서 더 많이 인용되는 것도 이러한 평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의 제 이론은 시대적 산물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학의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Breit and Spencer, 2004/2004)”도 경제학에 발을 들여놓은 계기가 대부분 대공황 때문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장 노동자의 15%가 일곱 살도 채 안 되는 나이의 어린 아이였었고, 이 어린 아이들이 새벽 다섯 시부터 황혼녘까지 공장에서 일했던 1830년대에 청년기를 보낸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비판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윤리적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역설적이게도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시대의 눈부신 발전을 인정한 인물이었다. 또한 부르주아에 대해서도 관대했다. “부르주아는 인간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처음으로 보여주었다. 그들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로마의 수도시설, 고딕성당을 능가하는 기적을 이룩했다(Strathern, 2001/2002, p.232).” 그럼에도 마르크스 생존 당시 공장 노동자의 열악한 참상은 결코 아동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귀가 찌지는 소음과 숨 막히는 열기 그리고 열악한 통풍 시설 속에서 분진가루를 마시며 장시간 — 하루 열두 시간 노동은 보통이었고 열일곱 시간도 드물게 있었다—노동하는 남성들을 파괴시켰다. 육체의 손상은 노동의 단조로움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그러한 조건 하에서 20년 이상을 일한 노동자가 나이 마흔에 이르게 되면 노인처럼 늙어버렸다. 운 좋게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고로 부상이나 실직당할 위험에서 용케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나이 마흔에 줄어드는 수입과 은퇴 후의 빈곤뿐이었다(Muller, 2002/2006, p.260).

마르크스가 노동가치설에 집착하여 자본주의 분석의 근본적 전제로 받아들인 것도 이러한 시대배경을 이해하면 수궁이 간다. 마르크스 이전의 어떤 경제학자도 마르크스가 했던 만큼의 중요성을 노동에 부여하지 않았다. 리카도가 노동이야말로 모든 사물의 교환가치에서 기초라고 주장한 바 있지

만 그의 관심사는 토지와 산업 간 이익의 분배였고, 그의 모델을 보다 편리하게 설명하기 위해 노동가치설의 대략적인 윤곽만 제시한 것이었다(Blaug, 1985, pp.92~93). 그러나 마르크스는 정치경제 관련 저서를 읽기 시작했을 때부터 노동가치설에 바로 달려들었다. 왜냐하면 노동가치(잉여가치)론이 인간에 대한 그의 철학적 전제와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설명을 연계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Muller, 2002/2006, p.294).

그리하여 마르크스는 1848년 『공산당 선언』에서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이러한 구조적 병폐를 제거하도록 호소하였다. 마르크스는 1871년까지 자본주의가 사멸할 것이라는 신념에 흔들림이 없었다고 한다(Desai, 2002/2003, p.84). 그러나 마르크스의 소망과 달리 자본주의 경제는 몰락하지 않았다. 『공산당 선언』을 출판한 이후에도 자본주의는 발전하였고, 노동자들의 생활 여건도 그 이전에 비해 점점 나아지고 있었다. 마르크스는 절대빈곤(비참함)보다 상대적 빈곤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설명하게 되었다. 아울러 현대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의 소외에 더 주목하고 있다.

본 논문은 마르크스의 이론과 그 이론에 근거한 예언이 맞았나, 틀렸나를 논쟁하고자 함이 아니다. 왜 대다수의 후속 경제학자들(분명히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었을)이 그에게서 떠나게 되었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언론학을 전공하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다. 연구자의 관점으로는 학계의 ‘과학주의’ 풍토가 마르크스와 절교하는 데 크게 일조하였다고 본다. 구조주의가 ‘과학자로서의 마르크스’에 주목한 것처럼 마르크스 역시도 과학자였다. 그러나 실증주의(경험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의 학문 풍토에서 관념론적인 마르크스의 이론 체계를 언론 현상에 접목하기란 여간 쉽지 않았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보다 구체적으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 ‘신고전과 경제학’의 단절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 1) 직관과 실증(경험)

“마르크스는 경험주의자가 아니었다. 참된 지식은 경험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의 비판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었다(Strathern, 2001/2002, p.239).” 과학의 발전은 베이컨이나 데카르트의 방법을 따르는 매우 지적인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 자기 자신의 방법을 추구해 나가는 매우 탁월한 인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사실 중요한 통찰력은 독보적(sui generis)인 데서 나온다(Gordon & Adams, 1989/1995, p.138). 이러한 점에서 보자면 마르크스의 사유체계와 그의 저작물 전반에서 펼쳐지는 내용은 독보적이다.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난 1,000년 동안 지성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 1위로 마르크스가 선정된 것도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실증(경험)적 측면에서 마르크스의 이론은 한계를 지닌다. 먼저 ‘착취’를 수량화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명쾌한 척도를 제시하지 못했다. ‘사회적 필요 노동시간’이란 것도 객관화시킬 수 없고, 수량화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기술의 발달에 의해 사회적 필요 노동시간은 줄어들 수 있고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노동시간을 동질화하여 집계함으로써 상품가치를 평가한 것도 문제였다. ‘이윤율 점감 경향’도 잉여가치(자본)를 전적으로 산업에 재투자할 경우(축적)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자본가들은 그들의 이익을 자본 축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이익을 사치성 소비를 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혹은 토지 및 콘도미니엄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또는 물가상승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스위스 은행과 거래하기 위해서, 못사는 사람을 부양하기 위한 자선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Gordon, 1965, p.215).

또한 마르크스는 형식논리 면에서 목적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마르크스는 이상적인 사회를 동경하며 합리적인 주장으로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러한 사회를 건설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을 경멸하였다. 마르크스는 필연적으로 결과에 도달하게 될 ‘과정’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자신을 공상적 사회주의자들과 구분지었다. 그렇지만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도 결국은 목적론적이다. 마르크스는 “각지는 그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그 필요에 따라서 얻는” 사회를 공산주의로 묘사하였다. 하지만 이런 사회에서도 가사노동 혹은 쓰레기를 치우거나 하수구를 청소하는 것과 같이

누구든지 선뜻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마르크스가 제시한 세계도 결국은 실현 불가능한 이상사회(utopia)일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프리드만(Friedman, 1953)은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what ought to be)”는 당위적인 것보다 “무엇이 사실인가(what is)”하는 실재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리드만은 무엇이 사실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어떠한 방법이 사용되었든 간에 그 결과들이 가지는 임시적인 성격을 받아들였다. 비록 규범적 판단 또는 가치판단을 무시하지 않았지만 단지 무엇이 사실인가에 대한 탐구를 지지했다. 따라서 프리드만이 옹호한 것은 논리 실증주의, 귀납법, 그리고 과학적 방법이었다. 프리드만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실증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은 경제현상을 일반화한 것들의 구성체로서 그 일반화는 임시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실증 과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까지 관찰되지 않았던 현상에 대한 타당하고도 의미 있는 예측을 가져다주는 ‘이론’ 또는 ‘가설’을 개발하는 것이다(Friedman, 1953, p.7).”

프리드만이 현대 경제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시카고학파의 태두로서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열렬한 옹호자이자 선두주자였다. 케인즈 이론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통화이론을 내세웠으며, 자유변동환율제, 부의 소득세, 가격이론, 소비함수에 있어서의 항상소득가설 등 다양한 이론을 개발하였다. 프리드만이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래 1980년대는 시카고학파가 거의 휩쓸다시피 했다. 따라서 현대 경제학의 주된 방법론이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지만 마르크스의 이론이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통 경제학(신고전과 경제학)만이 유일한 경제학이라고 해서 곤란하다. 경제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분석하는 시각의 차이도 인정되어야 하며, 서로 다른 패러다임에 입각한 경제학을 배격하기보다 상호보완적으로 연구할 때 경제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임배근·정행득, 1995, p.v). 총체적이면서 윤리적 요소가 포함된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을 때 경제학이 힘을 얻을 수 있다.

결국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 ‘신고전과 경제학’이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가치판단의 개입 유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를 위한’ 혹은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본질적으로 목적론적이며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있다. 그렇지만 ‘신고전과 경제학’은 가치판단의 개입을 배격한다. 즉 좋고 나쁨과 옳고 그름과 같은 가치적도는 경제학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신고전과 경제학자들은 가치와 목표의 타당성과 그것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회피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1998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미티아 센(Amartya Sen)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도 출신 특유의 깊은 사색과 철학적 통찰력을 지닌 센은 경제 분석 역시 사상과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정치학과 법학, 사회학, 문화, 윤리도덕, 인문학 등을 넘나들면서 인권, 여권, 빈곤의 문제 등을 다루는 센은 경제학이 사람들로 하여금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Sen, 1999/2001).

“사회적 가치와 지배적인 관행은 사람들이 향유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유에 영향을 미친다. 공유된 규범은 남녀평등, 아동 보호, 가족 규모 및 출산 패턴, 환경 및 기타 여러 제도와 결과가 다루어지는 사회적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배적인 가치와 사회적 관행은 또한 부패가 만연하느냐 척결되느냐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사회·정치 관계에서 신뢰의 역할에 영향을 미친다. 자유의 행사는 가치에 의해 조정되지만, 반대로 가치는 참여적 자유의 영향을 받는 공공 토론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조정된다. 이 각각의 관계는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Sen, 1999/2001, p.26).”

인문사회과학은 가치판단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자연과학조차도 연구자가 연구대상과 연구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 가치판단이 개입된다. 그러므로 ‘신고전과 경제학자들’이 스스로 ‘가치배제적’ 또는 ‘실증적’ 경제학자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렇게 주장하는 그 자체에 가치판단이 개입된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여건은 계속 변하며, 인간 생태도 변하고, 기술은 진보하며, 자원의 가용성에 관한 새로운 지식도 나타나고, 제도화된 행동규범도 변화한

다.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의 가치판단을 바꾸기도 한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똑같이 공감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상향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없다(Gordon & Adams, 1989/1995, p.xvii).

그러므로 일방적인 가치를 강요한다거나, 혹은 가치의 다름으로 인해 상대 진영을 폄하하거나 하는 학문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오히려 다른 이들의 가치(목적)도 존중하면서 자신의 이론체계에서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수단)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이 때 경계해야 할 사고가 바로 상대주의(relativism)다. 상대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떠한 합의에도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사회·정치·경제적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비주류 집단이 생존해오는 데 상대주의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인류학에서 비서구 사회의 ‘야만인’이 ‘원주민’으로 개명되는 데에 ‘문화적 상대주의’가 끼친 역할이 대표적이다. 마찬가지로 성, 인종, 민족, 종교 등에 있어서 권력으로부터의 소외자들이 숨통을 틔울 수 있었던 것도 상대주의에 근거한 다원적 가치가 존중받았기 때문이다. 신고전과 경제학자들이 득실거리는 대학의 경제학과에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이 그나마 자리를 잡고 있는 것도 주류의 관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체제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상대주의는 새롭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선진국 주민들이 안락한 삶을 향유하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허용한 자유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에너지 낭비가 지구온난화를 불러왔고, 각종 기상이변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현 세대의 자원낭비가 후손의 자원빈곤을 불러오고 있다. 상대주의가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만 존중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점점 상대주의가 들어설 여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나비 효과’가 상징하는 바와 같이 현대사회는 너무도 많은 것들이 엮히고설켜버린 것이다.

상대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충되는 가치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규범(norm)이 필요하다. 칸트(Immanuel Kant)의 ‘정언명법’이나 롤즈(John Rawls, 1971)의 『정의론』과 같이 규범적 체계가 수립될 때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 ‘신고전과 경제학’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가치관

단과 가치규범의 문제를 ‘이기심’ 및 ‘합리적 선택’의 사례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포괄적인 경제학적 규범의 단초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 2) 이기심과 합리적 선택

이기심은 경제학의 기저에 깔려 있는 인간 심리의 본질이다. 파스칼(Blaise Pascal)은 『팡세』에서 “이기주의는 모든 정치적, 경제적 무질서의 원인이다.”라고 말했다. 볼테르(Voltaire)는 여기에 덧붙여 “사회란 것은 이기주의 없이 형성되고 유지될 수 없다. 이는 성욕을 못 느끼는데 아이를 낳으려는 것, 식욕도 없는데 먹으려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 상업은 인간이 영원히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한다. 인간이 서로 관계 맺지 않는다면 예술도, 열 명이 모이는 작은 사회도 있을 수가 없다. 모든 동물은 자기애를 타고 난다.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타인을 존중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 자기애를 법률을 통해 적절히 억누르고 종교를 통해 세련되게 다듬는다. (중략) 이 같은 이유로 상인은 자선을 베풀기 위해 인도로 떠나고, 석공은 자기 이웃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돌을 깎는다(Muller, 2002/2006, pp.68~69).”

경제학의 고전인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의 본질과 원인에 대한 탐구(국부론)』도 결국은 볼테르의 주장을 답습하고 있다. “우리가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 양조장 주인, 빵 굽는 사람의 선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 덕분이다.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자기애이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이다(Smith; Muller, 2002/2006, 105쪽에서 재인용).”

『국부론』은 한 마디로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의 작동 원리를 분석한 책이다. 스미스는 자기애와 자기중심주의, 이기심, 자존심, 인정받고 싶은 마음 같은 인간성이 사회 제도를 통해 적절히 인도될 때 사회적으로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한 것이다(Muller, 2002/2006, p.92). 즉,

스미스가 말하고자 한 바는 이기심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공동선(public good)을 찾자는 것이었다. 시장은 이윤 추구의 동기와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개인적 이기심을 집단 이익으로 이끌어낸다. 그렇다고 이기적 욕구가 항상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았다. 적절한 제도가 마련됐을 때 이기심은 사회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이기심이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았을까? “노동자와 고용주는 이기적 목적 달성을 위해 조직을 만들지만 사회적 여건은 동일하지 않다. 법이 임금 인상을 위한 노동자의 단합을 막은 반면, 임금 동결을 위한 고용주의 협력은 막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주의 정치적 영향력은 노동자보다 강한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권한의 차이는 ‘주인’의 대부분이 투표권이 있는 반면, ‘하인’들은 투표권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고용주는 또 다른 점에서 노동자들보다 유리하다. 파업이 일어나면 고용주는 그날 벌여 그날 먹고 사는 노동자보다 오래 버틸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회의 이목을 끌지 않고도 쉽게 음모를 꾸밀 수 있다(Smith; Muller, 2002/2006, 111~112쪽에서 재인용).”

따라서 스미스는 위정자들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위정자들에게 공익정신 및 지식을 주입해 바람직한 정책을 쏟아내도록 하라는 것이다. “평생 동안 몇 안 되는 단순한 직업만 하면서 살아온 사람은 이해력이 상실된다. 그는 자연스레 아둔하고 무지하게 된다. (중략) 결과적으로 일상적 삶에서 정확한 판단도 내리기 힘들어진다. 그는 자기 나라의 크고 다양한 관심거리들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중략) 정부가 이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모든 발달된 문명사회에서 가난한 노동자인 국민의 다수는 필연적으로 이런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Smith; Muller, 2002/2006, 123쪽에서 재인용).” 흔히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만 우리가 주로 인용하고 있지만, 스미스는 오히려 국가의 ‘보이는 손’에 대해서 더 강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국부론』에서 정부의 기능을 분석하고, 재정을 어떻게 충당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수백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광범위한 공공지출을 권고하였다.

마르크스의 사상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헤겔(G. W. Friedrich Hegel)도 『국부론』을 읽었고, 시장이 갖는 위치와 인류에게 미치는 중요성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시장경제에서 이기적 동기가 어떻게 해서 상호의존 시스템을 창조하고 공공의 복지를 이끌어내는지 설명하면서 『국부론』을 직접 인용했다(Muller, 2002/2006, p.213). 그에게 철학자의 역할은 추상적이고 영원한 원칙을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진화되어온 제도의 기능을 연구하는 것이었다(Kelley, 1990, p.253). 이런 맥락에서 헤겔은 시장 자체의 고유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를 더 선호했고, 정부의 기능은 시장을 통한 자기이익의 추구를 가능하게 하는 틀(법/제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분명 스미스와 헤겔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마르크스는 이들의 견해를 뒤집었다. 마르크스는 시장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경쟁의 강제성을 도덕적으로 혐오스럽고, 인간관계를 동물적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것으로 묘사했다(Muller, 2002/2006, p.252). 즉 스미스와 헤겔과 같은 선대의 사상가들이 이기심을 잠재적인 사회적 효용으로 환기시켜 그것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면, 마르크스는 이기심을 탐욕으로 낙인찍었다. 이기심이야말로 부르주아 사회를 도덕적으로 추하고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만든다고 마르크스는 생각했다(Muller, 2002/2006, p.275). 또한 인류 불행의 진정한 원천이 바로 시장과 그것이 세상에 탄생시킨 계급이기 때문에, 정치적 개혁이 아닌 사회경제적 혁명을 통해서만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타파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매튜 아놀드(Mattew Arnold)도 마르크스와 유사하게 세상이 속물(philistine)화 되어가는 조짐에 반감을 품고 있었다(Muller, 2002/2006, p.309). 그러나 마르크스와 달리 아놀드는 자본주의가 이룩한 경제적 성취를 실질적인 것으로 여겼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않았다. 그가 제시한 해결책은 정부, 출판계, 교육적 제도들을 통해 국가의 문화적 수준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신자유주의에 관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하예크(Friedrich Hayek)는 시장의 활동이 이기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생각은 사실에 가까우나

상당히 왜곡된 개념이라고 보였다. 모든 경제적 활동이 이기심의 발로이지만 이기심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시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기심을 목적과 분리시키는 것은 개념적 오류라고 하였다. 덧붙여 인간 목적과 가능성들의 보다 고차원적인 개념을 실현하는 데 있어 정부가 나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Muller, 2002/2006, p.535).

이상에서 소개된 몇몇 경제 사상가들에게서조차 이기심 및 그에 대한 처방이 제각각임을 살필 수 있다. 많은 사상가들이 ‘이기적 동기의 강화’를 자본주의 생산성 혁명의 견인차로 지목했지만, 시장에 대해 가장 우호적 입장을 견지했던 사람들조차도 이기심의 추구가 반드시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인가? 볼테르, 스미스, 헤겔, 하예크가 옳은가 아니면 마르크스와 아놀드가 옳은가, 아니면 이들 제각각이 다 옳은 것인가? 그리고 동일 진영 내에서라도 이기심에 대한 가치판단이 일치하더라도 처방이 다른 이유는 또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가치규범이다.

만약 ‘이기적 행위’와 ‘합리적 행위’를 동일한 행위라고 한다면 ‘합리적 선택 이론’을 통해 이기적 행위에 대한 가치규범 설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합리적 선택은 규범적(normative)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합리적 선택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위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설명할 때 언제나 가장 높은 순위(최선)의 대안만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Elster, 1986/1993). 그 결과 어떤 사람의 관찰된 행동은 언제나 일정한 유형을 지녀야 한다는 의미에서 규범적이다. 이는 다음 <표 1>과 같은 설명의 논리 구조를 지닌다.

<표 1>에서와 같이 어떤 행위를 합리적 선택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신념 C가 있을 경우 행위 B는 행위자 자신의 욕망 D를 충족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둘째, 신념과 욕망 모두 내적 모순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즉, 행위자는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여 비중이 약한 욕망에 대해서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으로써 행위는 욕망과 신념에 의해 합리화되



## &lt;표 1&gt; 합리적 선택의 설명(논리) 구조

- ① C가 주어진 경우, B는 D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다.
- ② C와 D는 B를 유발시킨다.
- ③ C와 D의 집합은 내적으로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이 있다.
- ④ C가 있을 경우, 비중을 가지고 있는 D와 관련해 B는 최선의 행위이다 (각 욕망에 대한 비중은 행위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부과된다).  
 ※ 여기에서 C(cognitions)는 개인의 인식 혹은 신념을 의미하고, B(behavior)는 행위를, D(desires)는 욕망을 의미한다(Davidson, 1980).

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의해서 유발되어야 하며, 더욱이 ‘최선의 방법’으로 유발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요건은 일상생활에서 충족시키기 어렵다. 특히 합리적 선택 행위가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은 쉽게 유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흔히 선택에 있어 내적 일관성은 완비성(completeness)과 이행성(transitivity)의 두 공리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A, B, C라는 세 가지 선택 대안이 있는 경우,  $A > B$ 이고  $B > C$ 이면 반드시  $A > C$ 라는 삼단논법이 성립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완비성과 이행성이 동시에 충족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투표의 역설’이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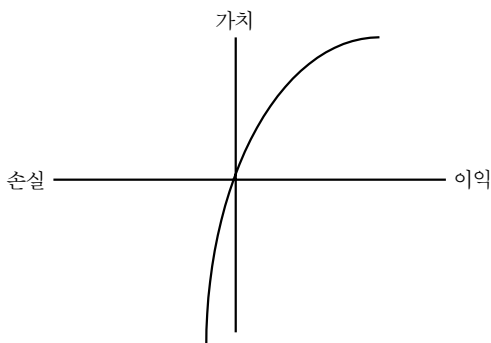
또한 ‘알라이스 패러독스(Allais paradox)’로 일컬어지는 현상도 내적 일관성의 위배를 보여준다(Lichtenstein & Slovic, 1971; Sugden, 1987). 즉 사람들은 일단

3) 특히 투표의 역설은 공공 선택의 영역에서 더욱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이다. 즉 사회적으로 유용한 공공재를 공급하고자 할 때, 어떤 개인은  $\alpha, \beta, \gamma$ 의 순으로, 어떤 개인은  $\beta, \gamma, \alpha$ 의 순으로, 또 다른 개인은  $\gamma, \alpha, \beta$ 의 순으로 선호순위를 매긴다면 사회적으로 최선의 선택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자원일지라도 대부분 ‘모든’ 사람의 동의나 만족보다는 다수결의 원리, 혹은 게임의 규칙(주로 정치적 협상력)에 의해 공급된다.

확실한 것을 선호하지만 불확실성이 개입되면 그 선호의 기준이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도박(gamble)과 같은 불확실한 상황보다는 확실한 선택을 선호하고, 잃는 것과 얻는 것에 대해서도 그 선호기준이 다르다. 손실에 대한 반응이 이익에 대한 반응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것—예컨대 돈을 잃어버렸을 때의 실망은 똑같은 양의 돈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다—이 더 일반적이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이라고 판단되는 준거 결과(reference outcome)도 때론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인지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준거점이 변하면 주어진 결과 역시 이익으로도 손실로도 평가될 수 있다(Kahneman & Tversky, 1979; 1984).

이와 같이 개인이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 판단의 준거로 삼는 ‘가치 함수’는 일반적으로 이익일 때에는 위로 볼록하고, 손실일 때에는 아래로 볼록하며, 손실일 경우에 경사가 더 급하다고 본다(<그림 1> 참조). 다시 말해 사람들은 이익보다 손실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므로 이익과 손실에 대한 준거점에 따라 결과들 사이의 가치가 변할 수 있으며 대안들 간의 선호 순위마저 바뀔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트버스키와 카네만은 합리적 선택 행위를 분석하는 데 기대효용 모델(expected utility model)보다 예상이론(prospect theory)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Tversky & Kahneman, 1981). 즉 예상이론은 기대효용의



<그림 1> 이익과 손실에 대한 가설적 가치 함수

확률치에다 가중치(weighted value(p))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선택을 p의 확률이 아니라 p의 함수관계로써 파악한다. 따라서 예상이론에서는 어떤 결과의 가치가 결정비중 w(p)에 의해 증가되거나 감소된다. 그 결과 낮은 확률은 비중이 과대화되고, 중간 혹은 높은 확률은 비중이 과소화된다. 예를 들어, 10만 원과 20만 원의 주관적인 가치 차이는 110만 원과 120만 원의 주관적인 가치 차이보다 더 크다. 따라서 낮은 확률에서 비중이 과대화 되는 효과가 높은 확률에서 비중이 과소화되는 효과보다 더 잘 드러난다.

결정 비중의 주요한 질적 특성은 결과의 확률이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아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경우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서그덴(Sugden, 1987)은 합리적 선택 공리를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소비자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p(케이크), q(빵), r(버터)의 상품꾸러미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한 개인이 p를 q보다 선호한다(케이크 > 빵)고 가정하자. 그런데 r이 개입되었을 때 선호 기준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즉 빵보다 케이크를 선호하는 경우일지라도 ‘빵+버터’가 ‘케이크+버터’보다 더 나은 효용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빵과 버터가 보완재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무엘슨은 상품 p, q의 선호가 다른 상품 r의 본질에 의해 오염되어지는 것(선호의 전이)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사람들의 선호 순위가 공리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순전히 보완 효과(complementarity effect)때문이라는 것이다(Samuelson, 1952, pp.672~673; Sugden, 1987, p.15에서 재인용). 마찬가지로 애로우도 합리적 선택의 문제에서 ‘제3의 선택 가능성’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애로우는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카네만과 트버스키 등이 주축이 된 인지 심리학적 이론의 기여를 높게 평가하지만 이를 경제적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의문을 품고 있다. 즉, 경제학이란 카네만 등이 사용한 방법처럼 카드 게임<sup>4)</sup>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

4) 카네만 등이 사용한 방법은 가상적인 카드 게임 상황에서 준거의 틀이 변함에 따라 개인의 선택이 어떻게 전이될 수 있는가를 규명한 것이다. 예컨대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서 문제 1과 2는 예비 도입단계의 설정만 다를 뿐 논리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선택에 있어 인지 심리학의 이론적 발견은 경제학적 전통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Arrow, 1982; Arrow et al., 1996에서 Arrow의 서문 참조).

그렇지만 사이먼 등(Simon, 1959; Simon, 1978; Simon et al., 1992)은 신고전학파가 고집하는 엄격한 합리성 공리는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보던 대개인의 합리성은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일 뿐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상황에 직면하여 전체 상황을 인지할 수 없고 단지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상황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만을 인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이먼은 일반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합리적인 선택 행위를 효용의 ‘극대화(maximization)’보다 ‘만족화(satisfaction)’의 수준으로 완화시킬 것을 주장했다. 효용의 극대화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소비자들은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보다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맥락

마찬가지로 문제 2와 3도 기대 확률과 그 결과치가 똑같다. 즉, 예상 ③도 \$30를 딸 확률이 .25(예상 ⑤와 동일)이고, 예상 ④도 \$45를 딸 확률이  $.25 \times .80 = .20$ (예상 ⑥과 동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합리적 선택을 하는 개인이라면 문제 1, 2, 3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똑같은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의 실험(카드의 선택) 결과 응답자의 분포는 문제 1과 2에서는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문제 3에 이르러서는 전혀 달리 나타났다(76% : 74% : 42% / 24% : 26% : 58%). 이와 같이 확률적 상황에서 사람들의 선택은 제약 조건, 혹은 결과의 틀(frame)이 변함에 따라 선호가 바뀔 수 있다.

〈문제 1〉 다음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 ① 반드시 \$30를 땀(76%)
- ② \$45를 딸 확률이 80%임(24%)

〈문제 2〉 다음은 두 단계에 걸친 선택상황이다. 첫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따내지 못하고 게임을 마칠 확률이 75%이고, 둘째 단계로 들어갈 확률이 25%이다. 만일 당신이 둘째 단계에 이르면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 ③ 반드시 \$30를 땀(74%)
- ④ \$45를 딸 확률이 80%임(26%)

〈문제 3〉 다음 중에서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 ⑤ \$30를 딸 확률이 25%임(42%)
- ⑥ \$45를 딸 확률이 20%임(58%)

에서 사이먼은 과거의 경험과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에서 이기적 행위 혹은 합리적 행위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았다. 결국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와 ‘신고전파 경제학자’의 차이는 ‘신념,’ ‘(불)확실성에 대한 기호,’ ‘이익과 손실에 대한 가치판단’ 및 ‘보완 효과(특히 경제와 정치가 결합된 경우)’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개인의 이기심을 어떻게 보는가, 더 나아가 그에 따른 행위의 결과인 사회구조를 어떻게 보는가와 같이 현 상태(status quo)를 바라보는 연구자의 시각 혹은 신념에 따라 다양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모든 연구자들의 세계관을 함께 묶을 수 있는 강력한 이데올로기 기구가 출현하지 않는 한 판단 유보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혁명이 확실히 가능하다고 믿는지, 그리고 혁명에 의한 이상사회가 정말로 살 만한 세상인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연구 집단을 분류할 수도 있다.

한편 이익과 손실에 대한 가치판단은 특히, 제도와 정치가 어떻게 결부되는가에 따라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sup>5)</sup> ‘극과 극은 통한다’라는 말처럼 ‘국가 소멸론’과 ‘작은 정부론’은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한 주장이다. 그렇지만 국가 혹은 정부가 어떠한 체제인가를 놓고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진다. 정치이

---

5) 사회주의(공산주의)혁명의 가장 큰 수혜자랄 수 있는 노동자들이 마르크스가 주장한 바대로 ‘단결은 하되’ 혁명보다 임금협상과 같은 사소한 투쟁에 몰두하는 것도 혁명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이익보다 현재의 손실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재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쉘볼스키(Przeworski, 1986, p.173)는 사회주의가 노동자의 복지에 있어 항상 자본주의보다 우세한데도, 노동자들이 사회주의를 선택하지 않고 자본가와의 타협의 길을 모색한 역사적 현실을 전환 비용(transitional cost)이라 할 수 있는 계곡 효과(valley effect) 개념으로 설명했다. 즉,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전환에는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같은 일련의 개혁조치가 필요한데, 자본가들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투자 철회와 자본의 해외유출로 대항한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전환 과정에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지속할 경우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의 복지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국가가 노동자들의 복지를 보장하거나, 자본가들이 이윤의 일부를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면 노동자들은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기꺼이 포기할 수도 있다. 서구, 특히 북구 사회민주주의 국가체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분석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표 2> 정치경제 시스템과 국가모델

		정치	
		진보(평등)	보수(자유)
경제	복지주의(분배)	사회주의	북구의 사회복지국가 이스라엘의 키부츠
	자유주의(성장)	남미의 좌파 신자유주의 중국의 시장사회주의	자본주의

념과 경제이념을 각각 좌우로 나누어 보면 다음 <표 2>와 같은 분류가 가능하다. 물론 여기에서 구분지은 정치 및 경제 이념은 학자마다 견해를 달리하여 재분류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념적 분류와 달리 현실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는 대부분 다당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각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은 천차만별이다. 예컨대 <표 2>에서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어디에 위치할까? 우리의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은 각각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 그리고 각 정당이 집권할 때마다 정치경제 시스템이 통제로 바뀔 수 있는 것인가? 만약 바꿀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그러한 시스템은 어떻게 규정지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답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 3. 분석적 마르크시즘의 공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 신고전파 경제학의 불안한 동거

사실 앞 장에서 인용한 엘스터, 쉘블스키 등은 분석적 마르크스주의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학자들이고, 2장 논의의 틀 자체가 분석적 마르크스주의와 가깝다(분석적 마르크시즘은 ‘합리적 선택 마르크시즘’으로도 불린다). 본 연구자는 미디어 산업의 분석함에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서 ‘신고전파 경제학’으로 분석 틀을 전환했고, 이 과정에서 ‘분석적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세례

를 받았다. 즉, 학부졸업논문으로 『언론 노동자의 계급적 고찰』을 썼으며, 석사학위논문으로는 분석적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평화 방송의 구조적 제약 요인 및 조직 구성원의 행위에 관한 연구』를 집필했다(이상기, 1991). 박사학위과정에서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대표 집단인 ‘시카고학파’에 매료되었다.

그럼에도 20대에 신봉했던 신념은 변하지 않은 것 같다. 즉, 한국사회(좀더 구체적으로는 언론계)를 더 잘 설명하고, 나아가 더 바람직한 사회(언론)를 만들기 위해 학자로서 기여하겠다는 것이 과거나 지금의 변치 않은 신념이다. 이러한 나는 마르크스주의자인가, 아니면 신고전파 경제학의 아류자인가? 과연 마르크스가 지향했던 가치와 신고전파 경제학자가 지향했던 가치는 전혀 다른 것이었을까? 앞서 언급한 대로 『경제학의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 (Breit and Spencer, 2004/2004)』은 대부분이 대공황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경제학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고백했다. 이들이 마르크스가 활약했던 19세기 중반에 태어났다면 제2의 마르크스가 되지 않았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마르크스가 20세기의 중반에 태어났다면 신고전파 경제학을 창설하는 데 가장 앞장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스트레턴은 본 연구자가 마르크스의 사생활에 대해 미처 몰랐던 많은 사실을 직시해주었다(Strathern, 2001/2002, pp.242~245). 예를 들어, 마르크스의 영국 생활은 그다지 가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입이 가장 적은 해라도 연간수입이 200파운드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당시 일반 사무원들의 연간수입은 75파운드였다. 생계비의 상당 부분을 담배연기로 날려버렸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녀를 두었으며, 설상가상으로 하녀인 렌첸 데무스와 불륜을 맺어 아들 프레디를 낳았다고도 한다. 또한 폭음을 일삼아 늦잠을 자는 일이 다반사였고, 몇몇 독일 친구들과 어울려 한바탕 술판을 벌이고는 거리에 나가 돌을 던져 가스등을 깨는 객기를 부릴 때도 있었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 외에 성기에 난 종기에 대해, 그리고 시거를 구입하기 위해 단별 바지를 전당포에 맡긴 사실 등도 앵겔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내 제니가 약간의 유산을 물려받았을 때는 주식에 투자하여 400파운드 이상을 손에 넣었다고 한 친구에게 자랑스럽게 편지를 쓰기도 했다.

장황하게 마르크스의 숨겨진 면모를 드러낸 것은 그를 폄하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본 연구자는 마르크스의 사생활에서 상당한 위안을 얻었다. 그 역시 평범한(?) 인간이었던 것이다. 나의 기본 신념체계가 아무리 굳건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의 나의 모습이 언제나 엄격한 것은 아니다. 때론 게으르고 나태하며, 현실과의 타협도 비일비재하다. 마르크스가 대영 박물관에 처박혀 24시간 내내 자본주의에 불타는 적개심을 품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인가?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 1) 무엇이 마르크시즘이며, 누가 마르크스주의자인가?

마르크스가 사망한 지도 100년이 훨씬 넘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마르크스를 추종했고, 그의 이념에 근거한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도 출현했다. 마르크시즘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인식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먼저 자본주의 사회의 권력은 자본가에게 있고, 그 권력은 자본가가 소유한 생산수단에 근거한다. 그리고 생산수단의 소유유무에 따라 계급 및 생산관계가 형성되고, 노동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소득수단이 없는 노동자 계급은 자본가 계급에게 끝없이 착취당하고, 복종과 굴종을 할 수밖에 없다. 국가(정부)도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 구조는 저절로 해소되기 힘들어 혁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론을 견지하고 있으면 그는 분명 정통(orthodox) 마르크스주의자이다. 그러나 현실 변화에 따라 마르크스주의도 변모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변증법적 유물사관 및 진화론적 사고에 입각해 마르크스 역시도 경제, 사회, 정치 현실이 끊임없이 변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사회 조직·제도가 권위를 갖게 되면 다른 조직·제도가 생겨나서 그것에 도전하고, 이러한 도전에 따라 새로운 종합, 즉 새로운 사회가 출현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변모하지 않는 마르크스주의자는 오히려 마르크스적이지 않다.

1990년대 이후 서구사회 및 세계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여 비판사회 이론은 다음과 같은 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김호기, 2001, 9~10쪽). 첫째,



정보화와 세계화의 충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다. 정보화가 일상적인 삶의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낳고 있다면, 세계화는 이제까지 사회이론의 분석단위였던 국민국가에 대한 근본적 재고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시장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요구하는 동시에 그에 대응하는 이론을 필요로 한다. 둘째,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과 함께 대안적 사회제도의 이론화 모색이다. 셋째, 정보사회와 밀접히 연관된 문화사회의 도래를 설명하고자 한다. 탈산업사회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노동보다 문화공간에서 점차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적 생활과 그 속에서 진행되는 정체성의 변화를 어떻게 이론화할 것인가가 새로운 관심 영역으로 부상했다.

분석적 마르크시즘도 이러한 환경에서 출현했다. 분석적 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주의의 변증법적 방법론보다 기존의 사회과학에서 발전된 방법론을 총동원하여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빠뜨렸던 이론과 현실의 간격을 메우고자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방법보다는 오히려 내용(계급, 착취, 권력과 지배, 역사적 유물론, 국가, 시장 사회주의, 자유)에 더 충실하고자 했다(Roemer, 1994). 특히 분석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모두가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경험적인 연구와 분석기법까지 동원하여 논의의 엄밀성을 추구했다. 그래서 이론적 내용은 정치(精緻)하지만 ‘강단 사회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sup>6)</sup>

그런데 분석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입각하여, 분석 철학, 경험주의, 신고전파 경제학 등을 마구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상당한 거부감을 표한다. 왜냐하면 포퍼(K. Popper)나 하예크 같이 마르크스주의의 강력한 비판자들이 동원했던 방법이 바로 방법론적

6) 분석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어떠한 종류의 정치운동에도 뿌리를 두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이 강단에 고립되어 있는 것이 다양한 형태의 도그마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주는 안전판 구실을 해왔다. 동시에 노동운동에 뿌리를 두지 못한 것은 이들로 하여금 다른 위협들에 대한 방어력이 더 약하도록 만들어왔다. 즉, 아카데미적 강박, 학계에서의 유행, 학문적 경력의 요구사항, 교수휴게실이 요구하는 판단기준과 균형감각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Wood, 1989).

개인주의였기 때문이다(신광영, 2001, 60쪽). 그렇지만 분석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스스로 변론하기를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개인을 원자화된 주체가 아니라 관계적 주체(relational subject)로 보기 때문에 개인만을 사회현상의 출발점으로 삼는 원자론(atomism)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급진적 전체주의(radical holism)는 개인들 사이의 관계마저 거시적인 구조의 산물로 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Elster, 1985). 그리고 이들이 스스로를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하는 이유는 첫째,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전통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이론적 혹은 경험적 문제제기도 마르크스주의 담론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문제제기를 다루는 언어도 마르크스주의 전통에 근거하고 있으며, 넷째, 마르크스주의의 윤리적 지향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신광영, 2001, 62쪽).

오늘날 마르크스주의 진영에도 수많은 분파가 존재한다. 특히 소비에트 및 동구의 몰락과 함께 현실 사회주의를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다. 즉 현실 사회주의는 마르크스가 예언했던 사회가 아니며, 궁극적으로 공산주의는 미완의 혁명이라는 입장과 이에 반하는 입장이 있다. 후자의 입장에 선 사람들은 마르크스의 ‘죽은 것’과 ‘산 것’을 구분지어, 살아 있는 마르크스의 유산과 다양한 진보이론과의 결합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의 비판 커뮤니케이션학 진영은 크게 구조주의, 문화연구, 정치경제학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김지운 외, 1991), 이 세 그룹 내에서도 다양한 하위 분파가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1990년대를 지나면서 국내 비판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이 거의 대부분 제도권으로 포섭되었다. 즉, 학문정책의 국가적 제도화라는 외부적 요인과 스스로의 제도권 편입 및 파편화라는 내부적 요인이 결합하여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했다(김서중·김은규, 2008).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정치가일 수도, 현장의 운동가일 수도, 학자일 수도 있다. 본 연구자는 특히, 마르크스주의 학자라면 분석적 마르크시즘에 한 번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실증주의를 요구하는 학보가 대부분이고, 승진 등 재계약 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분석적 마르크스주의식 접근과 글쓰기가 생존전략의 하나일 수 있다—아직껏 보수 진영에서 이를 비판한 사례는 보지 못했다—

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분석적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더 집중적인 논의는 다음 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 2) 분석적 마르크시즘에 대한 비판과 재반론

우드(Wood, 1989)는 『합리적 선택 마르크스주의: 할 만한 게임인가?』라는 글에서 분석적 마르크스주의를 다각도로 비판했다. 우선 ‘계급’ 및 ‘착취’와 관련하여 퇴머(1982a; 1982b; 1985)의 분석은 착취의 사회적 과정을 설명하였을 뿐 그것의 근원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는 것이다. 엘스터(1985)도 ‘말이 되는 (make sense)’ 것은 단지 자본과 노동 간의 유통적인 관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즉, ‘잉여’의 양적 측정보다는 생산자와 착취자 사이의 관계성과 그것이 발생하는 전제 조건(구조적 관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드가 보기에 분석적 마르크스주의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처럼 ‘교환의 영역’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석적 마르크스주의는 ‘계급형성’이 계급관계를 창출하는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대신 계급투쟁에서 계급들이 집단적 주체로 구성되는 (매우 제한적 의미에서의) ‘조직 과정’만 설명할 뿐이다.

둘째, 사회를 ‘개인들 간의 관계의 합’으로 재정의함(Carling, 1988)으로써 구조와 주체 간의 오래된 수수께끼를 해결했다고 주장하는 것(Elster, 1985)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즉, 분석적 마르크스주의에서의 개인은 ‘체화된 구조’일 뿐이고, 실제 ‘선택’의 순간이 닥쳤을 때는 선택할 것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이 모델에서의 ‘선택’의 주된 기능은 주체를 복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급을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주체로부터 우연적이고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다.

셋째, 분석적 마르크시즘이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도덕적 우월성을 증명하거나 그러한 이데올로기적 무기들을 강화시켜줄 수 있다면 앞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덮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실패했다고 본다. 엘스터(1985, p.166)가 비록 착취는 나쁜 것이며, 착취자들은 도덕적으로 그르고,

착취를 용인하고 착취를 만들어내는 사회는 없어져야 한다고 했지만 ‘세련된 설명력’에 치우치다 결국에는 이를 놓쳐버렸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분석적 마르크스주의자 중에서 가장 정치적인 쉐볼스키(1986, p.238)가 사회주의에 대한 선호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분석적 마르크시즘의 패러다임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 이들 주장의 취약성에 대한 자평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드는 분석적 마르크시즘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방법론적 개인주의, ‘분석적’ 방법, 물역사성, 수입 성층(income stratification)으로 이해되는 계급, 생산관계와 구별되는 시장관계에 대한 집착, 인간본성에 대한 ‘경제’ 모델 등. 이 이론적 형상군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영국적 실증주의가 대표적으로 공생하는 앵글로 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의 개괄도를 대표한다(Wood, 1989, p.82).” 결국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엄밀성’을 재확립하려는 노력으로 시작하여 여러 면에서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다.

칼링(Carling, 1990)은 우드의 분석적 마르크스주의 비판은 전능주의(everythingism)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무언가를 설명한다는 것은 과잉 부담이라는 것이다. ‘완전한 설명’은 분석적 마르크스주의만이 아니라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하여 그 어떠한 사회이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합리적 선택 설명은 일반적 설명이라기보다 특수한 설명의 필요조건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분석적 마르크시즘의 기여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마르크스가 반자본주의적 결론에 이르기 위해 고전적 정치경제학을 이용하였고, 결국은 그것을 전복시킨 것처럼 분석적 마르크시즘 역시 부르주아 진영의 합리적 선택 패러다임을 무장 해제시켰다는 것이다. 둘째, 공산주의적 미래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에 대한 고려조차 없어진다는 것을 일단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공산주의적 행위자가 더 이상 합리적 행위자가 아니라는 것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는 마르크스도 사회주의 구상에 합리적 선택 가정을 사용했으리라고 믿는다. 셋째, 시장행위, 경제행위, 합리적 행위 간의 차이를 명심해야 하는데, 뒤로 갈수록 그 일반성의 수준이 높다. 다시 말해 합리적 행위는

본질적으로 유인과 제약 속에서 최적화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합리적 선택 이론의 범위는 시장교환이론 나아가 경제이론으로 간주되는 것들을 모두 아우른 것보다 넓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합리적 선택도 한계가 있음을 고백했다. 즉, 인간의 동기가 모두 합리적 선택 동기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합리적 선택이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그것은 중요한 문제 중 일부에 대해 많은 해답을 갖고 있다(Carling, 1990, p.109).”

칼리니코스(Callinicos, 1990)는 우드와 같이 계급투쟁의 관점에서만 역사를 설명하려는 것은 계급투쟁의 역사가 계급투쟁의 격화를 불러일으킨다는 순환 논리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분석적 마르크스주의를 전적으로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 그는 분석적 마르크스주의가 공리주의적 인간관에 입각했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도덕이론과 마르크스주의 인간학과는 괴리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사회 구조의 변동을 행위로 완전히 환원시켜 설명하려는 시도도 방법론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Callinicos, 1987/1991). 그는 구조가 행위를 강압하지만 동시에 구조는 행위 주체에게 구조적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행위자로 하여금 구조를 변동시킬 수 있게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했다. 전자의 입장은 분석적 마르크스주의와 일정 정도 거리를 둔 것이며, 후자의 입장은 분석적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학자인 터너는 분석적 마르크스주의의 기여—특히 라이트(Wright, 1985)의 계급론—를 계급체제의 복잡성을 분석하려는 일관된 노력에 있다고 보았다(Turner, 1999/2001, pp.288~289). 즉, 계급 메커니즘을 착취로 개념화하면서, 동시에 공통적인 해방지향(불평등 축소)적 시각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분석적 마르크스주의가 호소력을 갖는 것은 기꺼이 자료를 수용해서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이론적 진술을 수정, 검증,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그러한 작업도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한, 그리고 해방의 가능성 쪽으로만 이론의 방향을 지으려는 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여타 이론적 관점과의 상호교환을 제한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운동가 혹은 혁명가로서의 마르크스주의자는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교조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것을 버리는 순간 그의 신념과 이상이 무너져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자로서의 마르크스주의자는 교조적이어서는 안 된다. 편협한 이론가는 주장만 할 수 있을 뿐 설득을 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마르크스는 무엇이든 조사했으며 또한 무엇이든 알고 있었다(우에노 이타루, 2001/2003, p.278)”는 사실은 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이 새겨들을 경구이다. 조셉 슈페터도 마르크스를 경제학자이자 학자로서 “대단히 학식 있는 사람이었다”고 평가했다(Galbraith, 1987/2002, p.166).

### 3) 정치경제학의 재정립과 언론학에의 적용

이상의 논의를 통해 궁극적으로 정치경제학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느낀다. 즉, 마르크스 이후의 정치경제학이 아닌 마르크스가 생존 당시에 가졌을 생각과 신념으로 정치경제학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은 정치와 분리해서는 존립할 수 없다. 경제학을 정치 및 정치적 동기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불모의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은 또한 경제적 권력과 경제적 동기라는 현실을 은폐하는 것이다. 경제학의 역사에 관한 모든 저서는 경제학이 정치학과 재결합해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이라는 더 커다란 학파를 다시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결론을 맺어야 한다(Galbraith, 1987/2002, pp.365~366).”

장상환(2002, 396~397쪽)은 『갈브레이스가 들려주는 경제학의 역사』 후기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한국 경제학의 현실은 너무나 한심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 경제학을 일방적으로 수입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체적 현실을 설명하고 처방할 수 있는 이론이 결여돼 있다. 우리나라에 수입된 경제학, 즉 신고전학파는 방법론적으로 철저한 개인주의와 균형론, 조화론을 특징으로 한다. 그 결과 모든 개인이 자본주의 생산 관계 가운데서 자본가 계급, 노동자 계급, 중간 계급 등의 특정 계급에 속하게 되며, 이들은 기본적으로 생산 수단의 소유에 따른 지배·종속 관계에 있음을 부인한다. 그 대신 개인의

이해관계의 마찰도 시장을 통해 조정돼 결국 조화로운 관계가 형성되며, 경기 상승과 후퇴에 따른 일시적 불균형 역시 시장의 힘에 따라 균형을 회복한다는 이론을 편다.” 결국 한국의 주류 경제학은 자본주의 경제 합리화론·옹호론으로서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과 주장에 대해 국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어떠한 답을 가지고 있는가? 역시나 서구의 이론을 수입하는 데 급급하고, 우리의 자생적 이론 생산에는 등한시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보아야 한다. 언론학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좀 더 좁게,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은 어떻게 재정립하여야 할까? 우선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 신고전파 경제학을 두루 섭렵할 필요가 있다. 전지를 통해서는 마르크스의 윤리적 지향점 및 현실사회에 대한 대안을 끊임없이 성찰할 수 있고, 후자를 통해서는 다양한 분석방법 도구를 갖출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경제적 지식을 정치적 지식과 접목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실 미디어 상황 특히, 정책 수립과정에서 나타나는 제 요인에 대한 설명과 분석에서 빈 공간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의 성찰과 새출발을 모색한 모스코 역시도 본 연구자와 유사한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마르크스의 역사적 분석, 사회적 총체성에 대한 이해, 도덕철학적 고려, 실천적 의지 등의 기존 원칙을 견지하면서 상품화, 공간화, 구조화에 대한 학문적 쇄신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치경제학은 국가중심주의 및 경제중심주의적 경향들을 시정하려 한다. 이유는 그것들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고 정치 아니면 경제 어느 한 쪽의 중대한 요소들을 희생시키기 때문이다. 정치경제학은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의 상호구성에서부터 출발함으로써 어느 한 쪽의 치중을 시정하려 한다. 양자 중 어느 한 쪽만이 정책과정에 필수불가결한 열쇠가 되지 않는다.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양쪽이 다 같이 필수적이다(Mosco, 1996/1998, p.358)”고 주장했다.

한편 조항제(2008)는 한국의 비판언론학을 성찰하는 글에서 정치경제학은 생산에, 문화연구는 소비에 강조점을 두고 있지만 그 둘의 상호적 구성에 관한 방법적 절차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생산과 소비, 거시와

미시, 구조와 행위를 결합시키는 ‘총체적 연구’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부언했다.

기존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은 주로 전자(생산, 거시, 구조)를 통해 후자(소비, 미시, 행위)를 설명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사실 후자에 대한 설명은 빈약했다.<sup>7)</sup> 반면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입각한 분석적 마르크시즘은 그 반대의 설명방식을 취했고, 결과적으로 전자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다. 예컨대 본 연구자가 분석적 마르크시즘의 이론적 틀을 갖고 수행했던 연구에서도 ‘언론사 소유구조의 바람직한 모델’ 개발에는 실패했다. 결국 “구조적 형태보다는 어떠한 구조이든지 그 속에서 활동하는 언론인과 경영자, 그리고 이들이 생산해내는 상품을 소비하는 수용자, 끝으로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 등이 상승적으로 맞물릴 때라야 비로소 바람직한 저널리즘이 창출될 수 있다(이상기, 2003, 87쪽)”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사실 생산과 소비, 거시와 미시, 구조와 행위를 결합시키는 영역은 아직 판독되지 않은 블랙박스와 같다. 그렇지만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미시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 중범위 이론, 구조화 이론, 기능구조주의, 사회 연결망 이론 등이 그 성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은 이러한 이론적 성과에도 눈과 귀를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이 다음과 같은 연구과

7) 이러한 점에서 비판언론학 진영에서는 문화연구가 또 다른 분파를 이루게 되었다. 즉, 미디어 생산자가 아닌 수용자에 주목하면서 이들의 비판적 해독과 문화적 실천을 강조하였고, 그 연구범위 또한 성, 지역, 세대, 인종, 일상생활 등으로 확대시켜나가고 있다. 대체로 문화연구자들은 정치경제학의 거시적 접근법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특히 리오타르(J. F. Lyotard)는 모든 최상위 담론의 진리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파악할 수 있는 특권적인 메타담론의 유용성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며, 마르크스주의 역시 메타담론이기에 현대 사회의 차이와 저항이 지나는 다양성과 복수성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 이론의 프로젝트를 거부했다(Fraser & Nicholson, 1999). 그렇지만 “구조적 요인을 파악하는 거시적 시각이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결과적으로 현실을 파악하기보다는 현실에 매몰될 우려가 커졌다(임영호, 2001, 122쪽)”는 진단도 있고, “미시화, 파편화되어 가고 있는 이론적 분위기와는 달리 현실은 다시 거시적인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이남표·김재영, 2006, 197쪽)”는 지적도 있다.



제에 도전하기를 제안한다.

첫째, 언론 노동자의 성격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매 선거 때마다 다수 언론인들이 정치권으로 진입하고 있다. 최근의 KBS 사장 해임 및 선임과 관련한 사태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언론은 구조적 특성상 정치권력 및 경제권력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이 요구된다. 즉 언론 노동자의 계급적 특성에서부터 정치권으로의 진입 동기, 이들과 정치·경제 권력과의 네트워크 구조 등이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언론 상품의 생산관계에 대한 조직론적 분석이다. 여기에는 조직 구성원의 층위 문제가 먼저 부각되어야 한다. 최근의 신입 방송인들 중 특히 기자, PD들은 특정 지역, 특정 학교 출신들로 한정되어 이들 스스로가 특권층이 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중견 간부가 되어 한국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좌지우지하게 될 때의 문제점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대규모의 중앙 언론사와 소규모의 지방 언론사가 처한 정치·경제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언론조직과 그 구성원들을 같은 수준에서 분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개별 언론사에 대한 미시적 접근에서부터 출발하여 중범위, 대범위 수준으로 확대시켜나가야 한다.

셋째, 미디어 정책에 대한 이론화와 현실 참여가 필요하다. 한국의 신문산업은 경제논리만큼 정치논리가 주요하게 작동하고 있다. 본 연구자 외에도 수많은 언론학자들이 한국의 신문 경영행태에 의문을 품고 있다. 즉,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도저히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워 보이는 데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지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이론화 작업을 해야 한다.

한편 미디어 정책에서의 ‘기술 우위(결정)론’에 대해서도 정치경제학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한다. 특히 통신이 방송 영역에 진입함으로써 기술이 논쟁을 선도하는 경향이 증폭되고 있다. 미디어 기술이 커뮤니케이션의 보조수단이자 하위영역이라고 본다면 이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기에 대한 대응논리가 없기 때문에 기술을 앞세운 산업·경영 논리가 독주하고

있다. 이밖에도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및 겸영, 공영방송의 민영화, 민영 미디어레프, 해외자본 진입의 과급효과 등 미디어 정책 수립과정에서 정치경제학이 기여할 부분은 적지 않다.

넷째, 장기적인 기획으로 역사적 유물론에 근거한 언론사(言論史)가 정립되어야 한다. 과거의 지사적(志士的) 언론인이 현재의 직업적 언론인이 되기까지 어떠한 계기와 정황이 작용했는지, 또한 신문과 방송의 토대 및 상부구조는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미래의 언론에 대한 방향성과 언론인의 소명에 대해서도 과감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 4. 결론: 마르크스의 부활을 바라며

대부분의 근대 과학자들은 인문학(사회과학)과 자연과학에 공히 정통했다. 정치경제학 역시도 사회제도나 법규, 시장과 정부의 역할 등에서 정치와 경제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출발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현대에 이르러 학문의 세분화와 전문화로 말미암아 이종 학문 간의 교류가 단절되었고, 동일 진영 내에서도 각종 분과를 낳았다. 결국 정치경제학은 직관과 실증, 이기심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개입유무 등으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 신고전파 경제학으로 양분되었고, 양 진영 내에서도 세포분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분석적 마르크스주의는 이러한 단절을 극복하고자 한 시도였다. 그럼에도 분석적 마르크시즘에 대한 평가는 아직껏 이중 잣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정통 마르크스주의 진영에서는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자 하고, 반대로 신고전파 경제학 진영에서는 마르크스주의라는 꼬리표를 단 이유 하나만으로 아예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본 논문의 계획서를 언론정보학회에 제출할 때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부제를 달았었다. “(분석적 마르크시즘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 신고전파 경제학의 ‘징검다리’인가 혹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인가?” 그런데 본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다리’의 상징성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되었다. ‘다리’는 그대로 놓여있을 뿐 그것을 건널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결국 사람의 문제였던 것이다. 마음만 달리 먹으면, 상황적 조건만 변하면, ‘다리’는 소통의 길 그 자체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을 경제학사적으로 접근한 것은 제대로 된 선택이었다. 분석적 마르크스주의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신고전파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본연의 정치경제학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언론학에의 응용이 미흡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처음 기획은 분석적 마르크스주의 논문 하나하나를 세세히 파고들면서 언론학에서 차용할 만한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분석적 마르크스주의의 출현 계기를 역사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캐들어 가면서 오히려 정치경제학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이 더 중요한 과업임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물론 3장 3절에서 언급한 연구 과제를 본문 속에 담았다면 더 완결성이 높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담기에는 논문 분량의 제약이 컸다. 후속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하도록 하겠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사회과학자로서 우리 모두는 마르크스 시대의 마르크스가 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과학자로서 우리 모두는 현 시대의 정치경제학자가 되자”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생애 전반에 걸쳐 독일의 관념론, 프랑스의 공산주의,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을 두루 섭렵했다. 마르크스는 이들을 종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본주의 사회가 소수의 부르주아보다 다수의 프롤레타리아가 더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이상향과 그에 이르는 길을 소개했다.

그러므로 사회과학자로서 우리 모두는 현존하는 사회과학 이론 전반에 열린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 이념의 노예가 되어서 다른 진영의 이론에 눈과 귀를 닫으면 결코 마르크스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물론 어려움은 있다. 마르크스 시대보다 엄청나게 불어난 지식의 양과 일국 차원을 넘어선 자본주의의 세계화 경향으로 한 분야에서조차 제대로 서기 힘들며, 문제해결의 단초조차 잡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결책이 없는 것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세계에서는 한 사람의 천재가 천 명의 범재보다 더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인문사회과학의 세계에서는 천 명의 범재가 한 명의 천재를 극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집합 지성’이 ‘단독 지성’보다 탁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문 간 소통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최근의 학문적 유행도 통섭(Wilson, 1998/2005) 혹은 학제 간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이다. 또한 복잡계(윤영수·채승병, 2005; 민병욱·김창욱, 2006; Capra, 1996/1998) 및 생태학적 연구(Hawken, 1993/2004)도 부상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복잡한 현실을 복잡한 그대로 설명하지는 것이고, 후자의 연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지는 것이다. 그만큼 현대사회는 복잡다단해졌고, 위기의 징후가 농후해졌음을 반증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홀로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 ‘신고전파 경제학’도 굳이 구분 지을 필요는 없다. 자유와 평등이 민주주의 사회의 주요한 가치이자 미완의 가치라고 본다면, 이들 각자가 경제 분야에서 강조하고 있는 평등(공정, 분배)과 자유(효율, 성장)에 대한 지향점도 결국 동전의 양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종합하여 실천하는 영역이 정치라고 한다면 ‘정치경제학’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미디어 분야로 시각을 좁히더라도 이러한 접근은 유용하다. 왜냐하면 미디어 상품만큼 정치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융합된 상품은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정책 또한 정치적 고려와 경제적 고려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더 넓은 의미에서의 커뮤니케이션학 역시도 ‘정치경제학적’ 분석틀이 요구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커뮤니케이션 분야는 철학(미학), 인문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심지어 공학까지 걸쳐 있다. 커뮤니케이션학이 소통의 학문이라면 이러한 다양한 학문 분야를 소통시키는 것이야말로 커뮤니케이션학의 진정한 역할이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학문이다. 시대의 요청에 응하고자 하는 자여, 마르크스가 될지어다.

## Ⅰ 참고문헌

- 김서중·김은규 (2008). 한국언론정보학회 20년, 비판적 학술운동의 고민과 한계.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43호, 47~80.
- 김승현 (1990). 『정보사회 정치경제학』. 서울: 나남.
- 김용학 (1991). 분석 맑시즘에 대한 한 변론: 엘스터의 방법론을 중심으로 『사회비평』, 제5호, 40~63.
- \_\_\_\_\_ (1992). 『사회 구조와 행위』. 서울: 나남.
- 김호기 외 (2001). 『현대 비판사회이론의 흐름』. 서울: 한울.
- 노병탁·김태환 (1984). 『정보경제학』. 서울: 박영사.
- 민병원·김창욱 편 (2006). 『복잡계 워크샵: 복잡계이론의 사회과학적 적용』.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신광영 (1991). 마르크스주의의 위기와 분석적 마르크스주의. 『사회비평』, 제5호, 8~39.
- \_\_\_\_\_ (2001). 에릭 올린 라이트: 계급론, 분석적 마르크스주의, 대안체제론. 김호기 외, 『현대 비판사회이론의 흐름』(49~71쪽). 서울: 한울.
- 우에노 이타루(上野 裕) 외 (2001). 신현호 옮김 (2003). 『세계사를 지배한 경제학자 이야기』. 서울: 국일증권경제연구소.
- 윤영수·채승병 (2005). 『복잡계 개론』.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이남표·김재영 (2006).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정치경제학: 비판적 계승을 위한 이론적 탐색.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33호, 193~225.
- 이상기 (1991). 평화방송의 구조적 제약요인 및 조직 구성원의 행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3). 『언론사 소유구조 변화와 저널리즘의 질』. 서울: 한국언론재단.
- 이상기·한혜경·오창호 (2006). 중앙 일간지의 ‘양극화’ 보도 분석: 양극화를 바라보는 시각의 양극화(현재화 vs. 잠재화).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언론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지역언론학회 심층세미나 발표자료집.
- 임영호 (2001). 한국 비판언론학의 문제설정: 반성과 전망. 2001 한국언론학대회 공동 심포지엄 자료집. 『뉴밀레니엄 시대의 언론학 연구와 교육』, 111~129.
- 임혁백 (1991).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전환의 비용: 쉐보르스키의 분석적

맑시즘. 『사회비평』, 제5호, 64~80.

\_\_\_\_\_ (1994). 『시장·국가·민주주의』. 서울: 나남출판.

정운찬 (2000). 경제학의 수리화에 대하여. 백낙청 엮음, 김남두 외. 『현대학문의 성격』(73~107쪽). 서울: 민음사.

조항제 (2008). 한국의 비판언론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 문화연구와 정치경제학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가을 통권 43호, 7~46.

Arrow, K. J. (1982). Risk Perception in Psychology and Economics. *Economic Inquiry*, 20, 1~9.

Arrow, K. J., Colomatto, E., Perlman, M., and Schmidt, C. (eds.) (1996). *The Rational Foundations of Economic Behavior*.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Conference, Vol.114. N.Y.; St. Martin's Press, Inc.

Blaug, M. (1985). *Economic Theory in Retrospect*, 4th edition. Ma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Block, F. (1977). The Ruling Class does not Rule: Notes on the Marxist Theory of the State. *Socialist Revolution*, 33, May-June, 6~28.

Bowles, S. and Gintis, H. (1990). Contested Exchange: New Microfoundations for the Political Economy of Capitalism. *Politics & Society*, 18(2), 165~222.

Breit, W. and Spencer, R. W. (2004). *Lives of the Laureates: Eighteen Nobel Economists*. 김민주 옮김 (2004). 『경제학의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 서울: 미래의 창.

Brenner, R. (1986). The Social Basis of Economic Development. In Roemer, J. (ed.). *Analytical Marxism*(pp.23~5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uchholz, T. G. (1989). *New Ideas from Dead Economists*. 이승환 옮김 (1994).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서울: 김영사.

Callinicos, A. (1987). *Making History: Agency Structure and Change in Social Theory*. 김용학 (1991). 『역사와 행위』. 서울: 교보문고.

\_\_\_\_\_ (1990). The Limits of 'Political Marxism'. *New Left Review*, 184.

Capra, F. (1996). *The Web of Life: A New Scientific Understanding of Living Systems*. 김용정·김동광 옮김 (1998). 『생명의 그물』. 서울: 범양사.

Carling, A. (1986). Rational Choice Marxism. *New Left Review*, 160, 24~62.

\_\_\_\_\_ (1990). In Defence of Rational Choice: A Reply to Ellen Meiksins Wood.

*New Left Review*, 184.

- Cohen, G. A. (1979). The Labor Theory of Value and the Concept of Exploitation. *Philosophy & Public Affairs*, 8(4), Summer, 338~360.
- \_\_\_\_\_ (1986). Forces and Relations of Production. In J. Roemer(ed.). *Analytical Marxism*(pp.11~2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88). Reconsidering Historical Materialism. In G. A. Cohen, *History, Labour, and Freedom: Themes from Marx*(pp.132~154). Oxford: Clarendon Press.
- \_\_\_\_\_ (1990). Marxism and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16, 363~387.
- Davidson, D. (1980). *Essays on Actions and Even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esai, M. (2002). *Marx's Revenge*. 김종원 옮김 (2003). 『마르크스의 복수』. 서울: 아침이슬.
- Downs, A.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 Row.
- 전인권·안도권 공역 (1997). 『민주주의 경제학 이론』. 서울: 나남출판.
- Elster, J. (1982). Marxism and Functionalism, and Game Theory: The Case for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Theory and Society*, 11(3), May, 453~82.
- \_\_\_\_\_ (1985). *Making Sense of Marx*.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86). *Rational Choice*. Oxford: Basil Blackwell. 김성철·최문기 역 (1993). 『합리적 선택』. 서울: 신유.
- Fraser, N. and Nicholson, L. J. (1999). An encounter between feminism and postmodernism. In Sterba, J. P. (ed.), *Justice: Alternative political perspectives*(3rd ed.)(pp.321~334). Belmont, CA: Wadsworth.
- Friedman, M. (1953). *Essays in Positive Econom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albraith, J. K. (1987). *Economics in Perspective*. 장상환 옮김 (2002). 『갈브레이스가 들려주는 경제학의 역사』. 서울: 책벌레.
- Giddens, A. (1976). *New Rules of Sociological Method: A Positive Critique of Interpretative Sociologies*. New York: Basic Books.
- Gordon, W. (1965). *Political Economy of Latin Americ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ordon, W. and Adams, J. (1989). *Economics as Social Science: An Evolutionary Approach*. The Riverdale Company. 임배근·정행득 공역 (1995). 『제도주의 경제학

진화론적 접근』. 서울: 비봉출판사.

- Hawken, P. (1993). *The Ecology of Commerce*. 정준형 옮김 (2004). 『비즈니스 생태학』. 서울: 에코리브르.
- Heilbroner, R. (1996). *Teachings From the Worldly Philosophy*. 김정수·이현숙 역 (2001). 『고전으로 읽는 경제사상』. 서울: 민음사.
- Kahneman, D. and Tversky, A. (1979). A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s under risk. *Econometrica*, 47, 263~291.
- \_\_\_\_\_ (1984). Choices, Values, and Frames. *American Psychologist*, 39, 341~350.
- Kelley, D. R. (1990). *The Human Measure: Social Thought in the Western Legal Tradition*. Ma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chtenstein, S. and Slovic, P. (1971). Reversal of preferences between bids and choices in gambling decis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89, 46~55.
- Mosco, V. (1996).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cation*. Sage. 김지운 역 (1998).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 성찰과 새출발』. 서울: 나남출판
- Muller, J. Z. (2002). *The Mind and the Market*. 김청환 옮김 (2006). 『자본주의의 매혹: 돈과 시장의 경제사상사』. 서울: Human & Books.
- Przeworski, A. (1986). *Capitalism and Social Democracy*, Cambridge.
- Przeworski, A. and Wallerstein, M. (1988). Structural Dependence of the State on Capital.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2(1), March, 11~29.
- Reiman, J. (1987). Exploitation, Force, and the Moral Assessment of Capitalism: Thoughts on Roemer and Cohen. *Philosophy & Public Affairs*, 16(1), Winter, 3~41.
- Rawls, J. (1971). *A Theory of Justic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Roemer, J. E. (1982a). New Directions in the Marxian Theory of Exploitation and Class. *Politics & Society*, 11(3), 253~287.
- \_\_\_\_\_ (1982b). Property Relations vs. Surplus Value in Marxian Exploitation. *Philosophy & Public Affairs*, 11(4), Fall, 281~313.
- \_\_\_\_\_ (1985). Should Marxists Be Interested in Exploitation? *Philosophy & Public Affairs*, 14(1), Winter, 30~65.
- \_\_\_\_\_ (1989a). What is Exploitation? Reply to Jeffrey Reiman. *Philosophy & Public Affairs*, 18(1), Winter, 90~97.



- \_\_\_\_\_ (1989b). Marxism and Contemporary Social Science. *Review of Social Economy*, 47, 377~391.
- \_\_\_\_\_ ed. (1994). *Foundations of Analytical Marxism*, Vol. I, II. An Elgar Reference Collection.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n, 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박우희 옮김 (2001). 『자유로서의 발전』, 서울: 세종연구원.
- Simon, H. A. (1959). Theories of Decision Making in Economics and Behavioral Sci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49(1), 253~283.
- \_\_\_\_\_ (1978). Rationality as Process and as Product of Thought. *American Economic Review*, 68(1), 1~16.
- \_\_\_\_\_ (1979). Rational Decision Making in Business Organiz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69(4), 493~513.
- Smith, A. (n.d.).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Campbell, R. H. and Skinner, A. S. (eds.) (1976). *The Glasgow Edition of the Works of Adam Smith*. Oxford.
- Strathern, P. (2001). *Dr. Strangelove's Game: A Brief History of Economic Genius*. 김낙년·천병윤 옮김 (2002). 『세계를 움직인 경제학자들의 삶과 사상』. 서울: 몸과 마음.
- Sugden, R. (1987). New Developments in the Theory of Choice under Uncertainty. In Hey, J. D. & Lambert, P. J. (eds.). *Surveys in the Economics of Uncertainty* (pp.1~24). N.Y.: Basil Blackwell Ltd.
- Turner, J. H. (1999). *The Structure of Sociological Theory*. 정태환 외 공역 (2001). 『현대 사회학 이론』. 서울: 나남출판.
- Tversky, A. & D. Kahneman (1981). The Framing of Decisions and the Psychology of Choice. *Science*, 211, 453~458.
- Van Parijs, P. (1986). A Revolution in Class Theory. *Politics & Society*, 15(4), 453~482.
- Wilson, E. O. (1998).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 최재천·장대익 옮김 (2005). 『통섭: 지식의 대통합』. 서울: 사이언스북스.
- Wood, E. M. (1986). *The Retreat from Class*. 손호철 편역 (1993). 『계급으로부터의 후퇴』, 서울: 창작과비평사.
- \_\_\_\_\_ (1989). Rational Choice Marxism: Is the Game Worth Candle? *New Left Review*,

48 『한국언론정보학보』 2009년 봄, 통권 45호, 한국언론정보학회

177, 41~88.

Wright, E. O. (1985). *Classes*. London: Verso.

(투고일자: 2008.11.28, 수정일자: 2009.01.08, 게재확정일자: 2009.01.19)

## Merits and Demerits of Analytical Marxism

Searching for Solutions to the Political Economy

of Media/Communication Industry

Sang-Khee Lee

Assistant Professor

(Dept. of Mass Communi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e recent crises of Marxism do not mean Marx's crisis. Marx said that he was not a Marxist. The purposes of this essay explore (1) the modern identity of the political economy; (2) the possibilities of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neoclassical economics and Marxist economics; (3) problems of the political economy in media and communication industry. I have begged for analytical Marxists, because of their good fruits. They accepted the methods of modern social science and they constituted a tremendous advance in the application of the scientific methods to the study of society. In insisting on micro-foundations(methodological individualism), analytical Marxism distinguished itself from structuralism and functionalism. I appreciate that analytical Marxism has reduced a theory to practice. But the works didn't listen to everyone(from Marxists to un-Marxists), and explain everything. Making theory with production/consumption, macro/micro, and structure/behavior is a road to the political economy in the long run. It also applies to media and communication industry. The realm of media/communication is broad, which in philosophy, humanities, politics, economics, sociology, and engineering. And media policy is more complicated by politicians who look at the same situation from different angles. By the aid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the political economy of media/communication shall explain at full length.

Key words: political economy, analytical Marxism, neoclassical economics, interdisciplinary research, media/communication industry